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4차) 중소기업 분야

- 중소기업의 3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3.29.(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붙임1 참조)’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달·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붙임2 참조)’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오늘은 네 번째로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의 3고(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3월 20일 박주민, 이용선 의원 등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중소기업 분과)’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소기업 문제의 심각성 - 3고(高)와 산업구조 재편의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1)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B2B)들은 고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가 크게 상승한 반면, 소재, 부품을 납품받는 대기업들은 납품대금을 올려주지 않아 대부분이 적자로 돌아설 정도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 2) 소부장 산업은 중소기업이 산업 전체의 47% 비중을 차지하고, 전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빚에 의존하는 등 백척간두에 서 있고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소부장 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이 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 사업과 같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3) 소비자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B2C)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확대로 플랫폼의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독과점 지위를 구축한 플랫폼 오픈마켓들의 과도한 중개 - 광고 - 배송 - 물류 - 결제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4)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가맹점·대리점 본사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소기업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필수물품이라며 시중가격 보다 고가의 물품 구매 강요,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의 가격차별, 가맹점주 단체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해제(부당 거래거절), 본사가 기획한 할인 쿠폰 및 할인 행사 등의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거나 과도한 폐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그 동안 많이 시정되어 왔던 불공정행위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 세계적인 탄소중립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 상황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는 미래 자동차의 주축이 전기차로 전환될 예정이고, 곧 소멸될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10만8천여 명의 중소기업 종사자와 10만여 명의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참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실태조사(2020.3월)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기업 및 고용의 약 47%(4,195개사, 10.8만명)가 엔진·동력전달·내연기관 전기장치 등 사업재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해당된다.

[참고]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관리사업자 업체 현황(2022년 4분기) 및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현황(2022.6월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종합/소형/원동기/전문 정비업 등 총 3만7천개 정도이며, 종사인원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

2.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위기 방지 행정 및 대책의 한계

- 1) 철강, 플라스틱, 종이 등의 소재, 부품의 재료를 공급하는 대기업들은 독점(시장점유율 50% 이상) 내지 과점(3개 기업 75% 이상) 상황이어서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계기로 재료 가격을 일방적으로 크게 올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반면,

소부장 중소기업 단체들은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의 개선을 원하지만 재료 독과점 기업들은 개별 중소기업별로 일방적인 인상 통보만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나서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가격예고제, 단체협상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나 시장자유만 강조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이다.

- 2)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법(상생협력법)」은 마련됐지만, 중소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여 반영된 쌍방 합의 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한 불안감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납품단가 연동제를 숙원과제로 여겼던 중소기업들은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납품거래가 실현될지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 3)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부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확대 등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소부장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 4) 전기차 전환에 따라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 생산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 산업 종사자를 위한 업종전환, 직업전환 등을 지원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 5) 카카오 불통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도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고, 플랫폼의 입점 중소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노출랭킹 조작, 광고와 판매 장려금 강요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만을 외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중소기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6)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발전, 전기차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산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종전환, 직업전환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탄소중립정책,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급속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업체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

3.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하는 중소기업 대책

< 3고(高)와 산업구조 재편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입법의 추진>

- 1) 중소기업들이 개별 기업차원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단체 차원에서 대기업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과 같이 시장지배력이 작은 일정한 요건의 중소기업 협회나 단체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체행위를 허용하여 고질적 갑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참고]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상대방 대기업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대방 대기업에 성실교섭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2 제12항).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 등을 촉진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본사, 부품중소기업, 소비자 사이에 3:3:3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단체협상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독일도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과 공동교섭을 위한 행위에는 담합행위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들은 물론 심지어 화물자동차 기사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담합행위로 제재하려고 하고 있다.

- 2)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로 위원회’는 소기업인 가맹점, 대리점들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피해에 대응하여 중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여론화하고 단체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왔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현재 새로운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어 있는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 3) 철강, 플라스틱, 종이 등 소부장 기업의 원재료 공급을 독과점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원재료 가격을 크게 인상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조립완성품 제조업체들과 건설 회사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감독행정을 하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진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 4) 독과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자사상품 우대행위, 입점업체 상품 차별행위 등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를 위한 대응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온플법)」 통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참고] EU의 독과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가 2023년 5월부터 시행되고, 독일과 영국, 호주 등은 각국 공정거래법 개정과 행정입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상품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인앱결제 강요(Anti Steering) 등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5) 민주당 윤관석, 강병원 의원 등 발의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전기차 전환에 따른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업체 종사자 10만8천여 명과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 10만여 명의 업종전환,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과 상담, 전환비용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자동차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붙임1]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2023.2.27. 현재)

목표	9대 민생 프로그램(상임위)	세부내용 및 추진 방안	대책 [‘23 예산]	수혜 대상
합계			예산 : 30조원 수준	
고금리 피해 회복	①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 위험이 있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서민금융법 제47조 제2항 단서 추가를 통해 서민금융보안계정의 은행 출연비율 하한을 설정 → 이 경우 현재 은행 출연비율 0.03%→0.03% 상향 하여 시중에 약 7,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효과 발생 	입법: 서민금융법 → 0.7조원 대출 효과 예산: 0.1조원	저신용자
	②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감면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방역 기간인 2020.3.~2022.3.사이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채 증가분에 대한 1.5% 이자 지원 	예산: 7.4조원	1. 가계 2. 자영업자 3. 중소기업
	③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대출 및 지원 - (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입법: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예산: 3조원	
	④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이자 감면 프로그램 예산 내에서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지원 재원 확보 	예산: 1.5조원	
高물가,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⑤ 에너지 물가지원금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 피해계층 중심의 하후상박형 지원 	예산: 7.2조원	소득하위 80% 4,117만명
	⑤-1 소상공인·자영업 자 난방비(가스 및 전기요금) 지원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대상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지원 (1인 30만원, 2인 40만원) - (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 	입법: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 행사: 간담회 예산: (1인)2.03조원 (2인)2.7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676만 (무점포소매업 제외)
	⑤-2 농업 난방비(전기 및 전기요금) 지원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원에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 육계 총가 난방비 지원 -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어업포함) 	997억원 262억원 0.2조원	원예농가 5만호 육계농가 0.3만호 농가 196.4만호
	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제도화 (행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발행 의무화, 지원사항 의무화) 	입법: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 예산: 0.7조원	전국민

목표	9대 민생 프로그램(상임위)	세부내용 및 추진 방안	대책 ['23 예산]	수혜 대상
주거 안정	⑦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호당 1.6억~3억의 최대 95%를 출자·용자하는 매입임대사업 10가지를 시행중임 - 2023년도 매입임대예산은 총 6조763억원이며 전년 대비 3조797억원 감액됨 - 미분양 등 매입임대사업 5조원을 추가 집행할 경우, ①기존사업으로는 32,885호 매입가능, ②「공동주택실거래가지수」(22.11월) 시가기준으로 서울(40㎡) 12,837호, 수도권(40㎡) 21,053호, 지방(40㎡) 65,790호의 추가매입 가능. 전국 부실·미분양주택 25%를 구제 효과 	예산: 5조원	무주택자
	⑧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 1.42~2.78% 이차지원 - 23년 예산 지원대상 17.6조원에서 1.4조원 추가 확대(23년 국회예산심의회시 2.0조원 기확대) 	예산: 279억원	무주택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⑨ PF 배드뱅크 설립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 및 부실채권 대책 (비은행권 PF 정상화) - 부실기업 정리가 아닌 정상화가 목적 - (입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자산관리 공사법 개정 행사: 세미나 예산: 2조원	1.중소 건설사 2.제2금융권 3.전국민* *금융안정 측면

[붙임2] '과제별 책임의원' 신청 현황 (총 39명)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신청 현황 (2023.3.2.현재)					
no	국회의원	비고	no	국회의원	비고
<1차> 총론(3/8)			<5차> 소상공인(4/5)		
1	박주민	좌장	1	서영교	좌장
2	김영배	간사(토론)	2	이동주	간사(토론)
3	우원식		3	김경만	
4	민병덕		4	김주영	
5	정태호		5	민병덕	
6	홍기원		6	박주민	
<2차> 금융(3/15)			7	윤영덕	
1	박주민	좌장			
2	민병덕	간사(토론)	<6차> 노동/고용1-특고(4/12)		
3	김성주		1	이학영	좌장
4	신동근		2	이수진(비)	간사(토론)
5	오기형		3	여기구	
6	양경숙		4	최인호	
7	이동주				
<3차> 주거·부동산(3/22)					
1	전혜숙	좌장	<7차> 노동/고용2-문화예술(4/19)		
2	조오섭	간사(토론)	1	홍익표	좌장
3	박상혁		2	유정주	간사(토론)
4	서동용		3	김승원	
5	윤준병		4	소병훈	
6	이수진(지)		<8차> 노동/고용3-돌봄(4/26)		
7	홍기원		1	남인순	좌장
<4차> 중소기업(3/29)			2	최혜영	간사(토론)
1	정태호	좌장	3	권인숙	
2	김경만	간사(토론)	4	서영석	
3	김교흥				
4	김한정				
5	이용빈				
6	이용선				
7	이원욱				
8	이장섭				